

III 표지인물과의 만남



▲ 사진 원쪽부터 김병오 편집국장, 박천상 연합회장, 윤서성 위원장

“지속가능발전은 범정부차원의 관심사”

윤 서 성

지속가능발전위원장
(대통령자문기구)

Interview / 대담 : 김병오 편집국장

III 표지인물과의 만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금년 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윤서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러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충실히 수행할 뜻을 밝혔다. 본지는 구립 20일 윤서성 위원장을 만나 지속위의 향후 계획과 기본법 내용 등을 들어봤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가 가고, 무자년 한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맞이하는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주시죠.

▲ 2008년 무자년은 새로운 시작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2간지의 첫 번째 해인 쥐띠 해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는 중요한 해임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후 ‘지속위’로 통칭)로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새로 출발하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빨리 로드맵의 채택 이후 기후변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아시아권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난 2000년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건설을 가치로 발족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지속위는 국민의 정부시절인 2000년 9월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국가정책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마는 2000년은 동강댐 반대운동이 범시민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해입니다. 저희 지속위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동강댐 건설계획을 취소하시면서 동시에 출범시킨 지속위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당시에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와 함께 지속위의 설립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1기와 제2기, 각 2년간의 임기를 거치면서 점점 더 발전해서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3기(2003. 12~2005. 12)위원회, 현재는 제4기 위원회(2006. 5~2008. 5)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위는 1기, 2기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 출범한 제3기 위원회와 제4기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로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로 그 위상이 달라진 것이 1기, 2기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그동안 주요 업무실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지속위에서는 주요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국토분야, 물·자연분야, 에너지·산업분야, 사회·건강분야, 지속가능발전이행분야, 갈등조정분야 등에서 여러 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국토종합계획 등 43개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속위가 추진한 주요 정책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제2의 새만금 사태로 비화된 장항갯벌 매립을 둘러싼 부처간, 중앙-지역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한 것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항

전시교육동

Exhibition & Education Building



▲국립생물자원관 개관식 장면

산단과 관련하여 18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을 종식시키고,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온 개발위주의 연안 매립정책을 지속가능한 연안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천식 기타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 컴퓨터 게임 중독예방 및 체계적 관리, 어린이 건강 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중점 과제로 이루어진 “어린이 건강대책”을 확정(2007.8)한 것이 중요한 성과입니다. 대책 마련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인 어린이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기 지속위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의제 21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지속위가 22개 부처와 함께 경제, 사회, 환경정책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통합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계획은 자원순환형 경제구조 조성과 친환경적 생산소비 체제의 구축,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의 보호,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를 위한 과제 등 48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77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를 마련하였는데, 지표를 통한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행계획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보이는 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총 5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본법 제정은 국가와 지방의 경제성장 중심 정책이 사회통합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국정원리로 채택해 운영하는 추세인데, 프랑스와 스위스는 헌법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벨기에, 캐나다 퀘벡은 법률을 제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교통, 농업, 건강, 교육, 물, 산림 등 경제·사회·환경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이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개발 위주, 혹은 눈앞의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간의 개별 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환경과 사회분야를 함께 고려하고, 미래세대의 권익까지 반영하는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수립된 전략과 이행계획은 2년마다 추진상황을 평가,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주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

III 표지인물과의 만남

립·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민사회·산업계·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거버넌스 기구인 국가와 시·도의 지속위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상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과 행정계획이 공론화를 거쳐 지속가능 발전의 철학과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면 이후의 정책추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2005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2006년)하는 등 정부정책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추진기반을 사실상 모두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위에서 현재 지방 지속가능발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도 등 지방자원의 지속가능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본법이 시행됨으로서 시·도는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지방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속위는 지속가능발전이 시·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방향을 합의하는 제도와 정책 기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을 대통령령에 보고하고 확정(2007.5.13)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로드맵은 지방비전 확립, 추진체계 구축, 실천역량 강화, 평가체계 운영 등 4대 분야에서 7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속위는 시·도의 원활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과 시·도 공무원의 인식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민·관·산으로 구성된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단(단장 김병완 광주대 교수)'을 구성(2007.11)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지난해 12월 6~7일 부산에서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제1차 시·도 공무원 워크샵'을 실시하여 지방이행체계 구축, 기본조례 제정 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2008년 1월 중 2차 공무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실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원단은 시·도 지방이행체계구축 매뉴얼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편람'을 발간하며, 권역



▲ 기후변화 국가대응 전략토론회

별로 전문가 풀을 운영하여 해당 시
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전 지구적으로 기
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
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
지?**

▲ 21세기는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
화될 전망(2007년 IPCC)이며, 특히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전세
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
스 총 배출량은 591.1백만CO₂톤으로
1990년 대비 98.7%나 증가(에너지 ·
산업공정이 95.3% 차지)하여 OECD
국가중 6위수준의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는 UN 고위급 회의
(2007.9.24), 미국 위싱턴 회의
(2007.9.27) 등을 계기로 최우선 글로
벌 아젠다로 부상하였으며, 교토 의정
서 이후 Post-2012 체제논의를 위한
『발리 로드맵』이 2007년 12월 15일에
채택되었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교토 의정서 상
의 부속서1 국가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 목표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과 개도국간 Post-2012 목표설정
을 위한 협상체제도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맞추어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결
하여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리 로드맵 채택 직후에 우리 정부는 감축, 적응, 연
구개발 등 3대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제4차 종
합대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국가목표를 설정
(2008년)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부문별 에
너지수요를 중점 관리하여 산업 · 주거 · 교통 등 에너지 소비저감을 유도
하고, 기후변화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R&D투자
를 확대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 적
응 · 기술개발 및 배출권거래 등 국가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
거 마련 등 법적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산업계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부문만 추구해야 할 과
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제이므로, 원칙의 천명과 방향 제시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대
응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라는 점에 인
식을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은 참여정부 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
입니다. 환경은 지속성과 연계성이 생명인데, 차기정부 수립시점에
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은 21세기에 국가가 지
향해야 할 핵심 국정원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위는 2008년도 2월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령 및 제반 사항을 착실히 준비 중입니다.

지속위는 이와 같은 기본법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수행해 온 거버넌스의
기능을 더욱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위는 환경영책을 포함, 경제 ·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가정책 및
제 · 개정 되는 법령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성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근본 기
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III 표지인물과의 만남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기념식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기념식수

2008년도는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은 2006년 10월에 마련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및 지표의 마련, 2007년 기본법의 제정에 이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완성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와 실천을 위해 '제2회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8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간행사에서는 기업체, 정부, 지자체 및 민간단체, 학계 및 각급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위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차기위원회의 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가비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꾸준한 담론을 시도하고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 이행성과를 유엔기구 등을 통하여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산업현장의 환경보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해 실무에서 노력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환경기술인은 지속가능발전이 현장에서 실천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기술인 여러분들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서성 위원장 프로필

● 주요학력

성명: 윤서성(尹瑞成)
생년월일: 1943. 6. 24
출신지역: 부산
학력: 1958 ~ 1961 : 부산고등학교
1962 ~ 196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5 ~ 1987 : 독일 Goettingen 大 환경
법학(석사)
1997 ~ 1999 : 성균관대학교 환경법학(박사)

● 주요경력

1973.12 ~ 1975. 8 : 총무처 행정사무관
1975. 9 ~ 1980. 1 :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
(행정관리담당실, 의정과)
1980. 1 ~ 1981.12 : 환경청 법무담당관(서기관)
1982. 4 ~ 1985. 3 : 환경청 종합계획과장, 환경
정책 비서관
1988. 1 ~ 1989. 3 : 환경청 수질제도과장
1989. 3 ~ 1990. 7 :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1990. 7 ~ 1992. 8 : 환경처 폐기물관리국장
1993. 8 ~ 1994. 3 : 환경처 폐기물자원국장
1994. 3 ~ 1994.12 : 환경처 수질보전국장
1994.12 ~ 1995.12 : 환경부 기획관리실장(1급)
1995.12 ~ 1998. 3 : 환경부 차관
1998. 3 ~ 1999. 6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문위원
1999. 6 ~ 2001. 4 : 충주대학교 환경공학 교수
1999. 2 ~ 2002. 2 : 환경마크협회 회장
1999. 5 ~ 2002 : 녹색상품구매 네트워크(GPN)
공동위원장
2001. 4 ~ 2007. 4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2003. 3 ~ 현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연과학분과위원)
2007. 4 ~ 현재 : (재)드림리프문화재단 이사장
2007. 8 ~ 현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상 별

근정 포장(1979.12.29)
홍조근정 포장(1993.12.16)
황조근정 포장(2003. 2. 3)